



KBS

노동조합 특보

발행인 정조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 02-781-2990 | 팩스 02-781-2999

이메일 kbsunion@kbs.co.kr | 트위터 @kbs_union

2018년 1월 31일 발행

kbsunion.or.kr

25호



보수규정은 왜 이사회 통과 안되나?

이사들의 기막힌 말·말·말

원포인트 특별다수제, 사내 구성원 평가 점수 반영하라



38명 VS 4,000명? 보수규정은 왜 이사회 통과 못하나?

이사회가 보수규정 보이콧, 왜?

매년 노,사간 임금협상을 합의하면 후속으로 이사회 의결 사항의 처리 절차가 남아있다. 요율과 금액 모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한다. 과거 어떤 이사회도 이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노, 사간 임금협상 합의 후 이사회 의결사항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결 사항으로 처리된 적이 없는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가 있다. 그 안건은 바로 자원관리/재원관리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결렬이다. 자원관리/재원관리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의 의결은 경영회의에서 처리하면 가능하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영회의에서 처리하여 왔다.

조건부 보수규정 처리?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사회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경영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려고 한다. 정작 의결사항인 임, 직원들의 보수규정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모이사는 자원관리/재원관리 노동조합 임금이 확정되면 직원들의 보수규정을 처리해 준다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언행인가. 본인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경영회의 업무를 강탈해 이사회 업무도 아닌 일로 강짜를 부리고 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삼척기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제는 KBS직원들은 왜 보수규정이 이사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행태의 모습으로 이사회를 꾸려간다면, 차기사장 공모와 선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는가.

명백한 임금체불!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원칙에도 어긋나며 기본과 상식이 없는 이사회들의 이런 모습을 KBS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지 임금 피크제에 도달한 직원들은 보수규정의 미 개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임금체불이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1월까지 보수규정 개정이 지연된다면 경영진은 물론이고 이사들까지 임금체불로 고소할 것이며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직원들의 임금을 불모로 몰려져의 극한을 보여주는 이사회는 부디 정신 차리고 경영방송 이사로서의 소명을 잊지 말라. ☘

2017년 임금협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총액 요율(%)	정액(만원)	합의일	비고
KBS노동조합	2	150	2017.12.22	
언론노조 KBS본부	2	150	2017.12.22	
KBS공영 노동조합	2	150	2017.12.22	
국악관현악단	2	99	2017.12.29	- 국악수당4만원 인상
연봉직	2	50	2017.12.29	- 150만원 정액중 100만원은 처우개선 나머지 50만원 지급
관현악단	2	150	2018.1.17	교섭진행 : 언론노조KBS본부
방송전문직 (음향디자인)	2	150	2018.1.17	교섭진행 : 언론노조KBS본부
자원/재원 노동조합	노: 총액4%+150만원 사: 총액2%+150만원		결렬	교섭진행 : 언론노조KBS본부

임금교섭 경과 확인서

KBS노동조합은 2017년 교섭대표노조로서 공경대표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부 노동조합 및 이사회에서 2017년 임금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데 대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한 KBS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교섭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협상과정을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관현악단, 자원/재원관리, 방송전문직 노동조합 임/단협 과정

본부노조(관련)	자원노조	재원노조	방송전문직노조
			제2016-09-01호(2016.9.9) - 2016 임단협 안건제출
KBS노조17-218(2017.10.19) 단체협약 개정안 제출 요청			
	2017-11-1(11.1) -KBS본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		2017.10.30. 단협개정안 제출(코비스)
	2017-11-2(11.17) -단협1편으로 통합요구	2017-4(11.14) -KBS본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	제2017-11-01호(11.16) -단협1편으로 통합요구
	2017-11-3(11.22) -KBS본부와 간담회통보	2017-5(11.22) -KBS본부와 간담회 통보	제2017-11-03호(11.23) -KBS본부와 간담회 통보 -복지성 임금/타 복지제도 의견 제출
	2017-11-4(11.30) -가처분 제기, KBS본부와 입장을 같이한다.(단협 거부 의사)	2017-6(11.30) -가처분 제기, KBS본부와 입장을 같이한다. (단협 거부 의사)	
	2017-11-5(11.30) -가처분 제기, 2017년 임금은 2018년에 함께 진행 (임협 대행 거부 의사)		교대노조가 안건 정리하여 관정용 위원장에게 확인 요청 (2017.12.7 코비스)
	2017-12-1(12.1) -2017-11-5 같은 내용	12.4 박윤규 위원장으로부터 전반기 상황 문의하는 전화 올	12.26-28 임단협 실시 단협에는 정점을 찾아 갔으나 임금에서 이견이 커 결렬 (사측안 2%+1.5%(총액)
12.26-28 임단협 실시 내용 본부노조 사무처장에 통보-불참		12.27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거부 결의	
12.28 정광철중앙 참석 -사측안 거부로 결렬	12.28 14:00-15:40 임금교섭진행 (조합 코비스메일로 결과통보) -노사 양측 의견제시, 노측 일반직 수준의 임금복지 요구 결렬선언 (자원, 재원 노동조합 위원장 직접 선언)		
12.29 사측 최종 제안 노측 거부 (2%+일시금 150만원), 최종결렬.			

이사들의 기막힌 말·말·말

“아~ 마음은 같대요 몸은 철새!”

어느 이사는 본인이 여권시절에 사장 임명을 제청해놓고 야권으로 입장이 바뀌니 사장해임에 기권을 했다고 한다. 성(性)희롱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분을 가리켜 변절자라는 말들이 오가는게 안타까울 뿐

“사장 가는 길은 나에게로 통한다.”

여권 이사들은 (고사장 해임 국면부터)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사들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장 후보들을 만나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모 이사는 이미 얼마 전부터 유력 사장 후보들을 만나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다녔다는 후문이다. '과거처럼 정권의 오퍼나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 이사회가 키를 쥐고 갈것이니 나를 통해야만 한다'

“이사회 퇴장이 아닌 이사회 사퇴가 더 명분이 있었을 터!”

야권이사들이 “이인호 이사장 상중에도 아랑곳 않고 속전속결로 고사장 사퇴를 진행하고, 고사장 소명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임 결정한 이 결과는 대한민국 언론사 자율서를 침해한 것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며 줄줄이 이사회에서 퇴장을 했다고 한다. 이사회 퇴장이 아닌 이사회 사퇴가 더 명분이 있었을 터!

특별다수제에 대한 여권 이사들의 말

현 여권 이사들이 야권 이사일 때 “여야 추천 이사 구성이 7대4로 여당 측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구조 아래 KBS사장은 언제나 정권에 맞는 인사로 임명됐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고려할 때 11명의 이사회 구성원들 중 진짜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도입할 것 인가.

“노조는 내손안에 있소이다”

‘내가 1, 2 노조 다 만나봤다. 내가 모두 다 컨트롤 가능하다.’ 대체 이 분은 이사장 할아버지라도 되나요? 본인이 사장 선임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듯 유력 사장 후보들을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도 아닌 대놓고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허풍을 떨고 있다한다. 그리고 KBS노조의 누구를 컨트롤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다.



신임 사장 선임

1. 원포인트 특별다수제 실시하라 2. 공개 심사 후, KBS 구성원 평가 점수 반영하라

예산만 쥐어짜다

OUT



이병순 사장
2008.8월~2009.11월
13개월

우유부단
청와대 눈치보다

OUT



길환영 사장
2012.11월~2014.6월
19개월

보궐임기 내내
색깔바꾸기 하다

OUT



조대현 사장
2014.7월~2015.11월
16개월

전 정권
하수인 노릇하다

OUT



고대영 사장
2015.11월~2018.1월
26개월

감냥 안되는 사장 꺾해야 2년

최근 몇 년간 공영방송의 사장들은 주어진 임기를 꺾어야 2년을 채우고 떠나갔다. 정치 공학적 이유를 배제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의 사장들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의 부족에 있다 하겠다.

위 사장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KBS 구성원들의 지지와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낙제 경영, 독선과 불통으로 전혀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구성원들의 철저한 버림을 받았다.

이런 자질 부족의 사장들이 스쳐지나가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공영방송 KBS이며 바로 시청자들이다. 지난 수년간 새로운 사장이 와서 인사니 조직개편이니 하는 것들만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동안 KBS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콘텐츠 생산에서 멀어지게 되고 지상과 위기를 돌파할 어떠한 비전도 구심점도 없는 시쳇말로 무주공산인 상태로 도끼자루만 썩어가고 있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감냥이 안 되는 인물들을 사장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결함에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임명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철저해야 한다. 여야추천 이사들이 숫자 싸움으로 절차적인 형식만을 명분으로 해서 안 된다. 방송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 조직 관리 능력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뿐만 아니라 KBS 구

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정권의 뒤편으로 낙하산 사장 임명되는 구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원포인트 특별다수제 실시하라

현재 여야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발의안 중에서-

KBS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요구한다. 이미 여야가 모두 인정한 사장 임면의 특별다수제를 이번 신임 사장 선출 시에 즉각 실시하라. 아직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KBS 노동조합이 수년 동안 투쟁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의 핵심 내용이고 현재 여야가 인정한 내용이 아닌가.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고 시행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이사회가 이 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방송법 개정과 함께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김서중 이사(한국기자협회 인터뷰 중)

'비단 고대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병순-김인규-길환영-조대현 5명의 낙하산 사장 때도 똑같은 행태가 벌어졌다. 이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 방송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딜레마다'

-전영일 이사(한국기자협회 인터뷰 중)

이미 여권 이사들도 방송법 개정과 특별다수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번 신임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를 실시하여 더 이상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상과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제대로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

인터넷 중계 등 공개 심사 후, KBS구성원 평가 점수 반영하라

그 동안 사장 선임은 늘 비공개로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장점으로 사장으로 임명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신임 사장에 대한 KBS구성원의 동의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사회는 사장 선임 심사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KBS구성원들의 평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라. 낙하산 논란을 종식시키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